

경 제 법

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사채청약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전체 계약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약관에 의하고 나머지는 일반 계약에 의하는 경우 약관에 의하지 않는 나머지는 위 법의 약관이 아니다.
- ③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도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④ 건설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만든 택지공급계약서는 위 법의 약관에 해당한다.
- 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면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의 약관이 될 수 있다.

문 2.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인 어떤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甲회사 45%, 乙회사 23%, 丙회사 10%, 丁회사 7%이며, 丁회사는 乙회사의 계열 회사이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甲회사 ② 甲회사, 乙회사
③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④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⑤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문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소비자만을 의미한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에 의한다.
-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여객운송업에 있어서는 위 법의 명시적무가 면제된다.
- ㄴ.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ㄷ. 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하였다면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① $\neg, \perp$ ② $\neg, \supset$ ③ $\perp, \supset$
④ $\perp, \supset$ ⑤ $\supset, \supset$

문 6.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신이 만든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 ㄴ. 사업자로부터 목장갑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
- ㄷ. 사업자로부터 어망을 구매하여 고기잡이에 사용하고 있는 어부
- ㄹ. 사업자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하여 짜장면을 만들어 팔고 있는 음식점 주인
- ㅁ. 농촌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배추를 선물 받아 김장김치를 담근 주부

- ① $\neg, \perp$ ② $\neg, \square$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sqsupset$ ⑤ $\sqsupset, \square$

문 7. 대기업 甲으로부터 사업용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중소기업 乙은 위 거래에서 사용된 甲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다.
-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④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 ⑤ 법원에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문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할부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할부계약으로 구입하여 2일 동안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할부계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철회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할부거래업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직접 할부금 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 받은 재화의 반환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소비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문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② 「형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열회사 판단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도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없다.
- ㄴ.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계열출자는 금지된다.
- 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ㄹ.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의한 거래로서 당해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정형화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규제가 아닌 것은?

- ①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제도
-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제도
- ③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제도
-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도
- 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제도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자에 관하여는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후자에 관하여는 사업자 사이의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 ㄴ. 전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ㄷ. 양자는 모두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 ㄹ. 전자는 사전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나, 후자는 사전신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ㄴ.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속적인 부당염매의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한다.
- ㄷ.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ㄹ. 불이익제공행위에서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불이익제공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 외에 그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4.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자기본법」
- 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ㄷ.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관련 상품시장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과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④ 甲회사 40%, 乙회사 40%, 丙회사 10%, 丁회사 10%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에서 甲회사와 丁회사와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시정조치로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시된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거래단계 제한
- ② 영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
- ③ 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방해
- ④ 상품 수송 제한
- ⑤ 가격의 유지

문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판매 행위
- ② 전화권유판매원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
- ③ 제품 설명이 담긴 전단지나 잡지를 배포하여 주문받아 판매하는 행위
- ④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한 청약과 판매 행위
- ⑤ 신문에 상품 광고 및 주문 전화를 게재하여 판매하는 행위

문 18.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자기본법」
 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ㄷ.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에 의해 그 사업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제재로 옳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 ② 과태료 ③ 과징금
- ④ 영업정지 ⑤ 형사처벌

문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 법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ㄴ.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ㄷ. 자회사(국내외 상장법인도 아니고, 공동출자법인도 아니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아닌 경우)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소유하는 행위
 ㄹ. 위 법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ㅁ. 국외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② 차별적 취급과 관련하여 현저한 가격차별이 있으면 위법성이 법률상 추정된다.
- ③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성립에는 방해하는 사업자와 방해받는 사업자 간에 경쟁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④ 끼워팔기의 상대방은 다른 경쟁자의 고객일 수도 있었던 사업자를 말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오인을 하고 합리적 구매결단에 방해를 받아 오인에 기초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의 요건으로 이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② 5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될 것
- ③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④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⑤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문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원회의의 의사는 심판관리관이 주재한다.
 ㄴ.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소회의는 비상임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ㄹ.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를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의를결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없이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위 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위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법 철 학

문 1. 고대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로고스 이론은 스토아학파의 법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 ㄴ. 그리스 초기 자연철학자들은 노모스와 피시스를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 ㄷ.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노모스를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ㄹ. 소크라테스(Sokrates)는 법을 강자의 이익으로 보았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2.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플라톤은 『국가』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최선의 통치라고 주장하였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통용되는 법의 일부는 자연적이고 일부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이해하였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덕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 ⑤ 플라톤이 지배계급의 사유재산제 철폐를 주장한 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대하였다.

문 3.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토아학파의 법이론을 기독교적으로 변형하였다.
- ②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별하였다.
- ③ 인간이 이성을 통해 영구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자연법의 내용으로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 ⑤ 인정법은 영구법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문 4. 스코투스(D. Scotus)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영구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입법자로서 신만이 존재한다.
- ② 자연법의 구속력은 신의 권위와 의지에서 비롯된다.
- ③ 실정법은 자연법에 모순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다.
- ④ 노예제를 규정한 실정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 ⑤ 신이 의욕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며, 반대로 선하기 때문에 신이 의욕하는 것은 아니다.

문 13.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칸트(I. Kant)는 의무만을 동기로 삼는지 아니면 여타의 동기도 허용하는지에 따라 도덕과 법을 구별하였다.
- ② 켈젠(H. Kelsen)은 법이 강제질서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질서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의 태도는 법이 도덕에 따를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밀(J.S. Mill)의 해악원칙(harm principle)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강제가 허용된다.
- ⑤ 데블린(P. Devlin)은 확립된 도덕이 좋은 정부와 같다고 보아 반도덕적 행위가 정부에 대한 반역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문 14. 법효력의 근거에 관한 다음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법적 의무는 정의(正義)에 의해서만 근거지워질 수 있다.
- 법은 힘으로서 강제할 뿐이며, 가치로서만 의무를 부담시킨다.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언명령을 보장하는 법만이 법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

- ① 법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준수하거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 ②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의 규범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 ③ 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명령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 ④ 법은 전체적으로 실효적인 질서에 속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 ⑤ 법은 법이념과 일치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문 15. 일반법학(Allgemeine 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각 분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문제를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려고 하였다.
- ② 권리, 의무, 법률관계, 책임, 규범 등 법의 기본개념 및 원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 ③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치나 이념, 정치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 ④ 법은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의 규범과 규율로서 승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법으로 기능하는 것만이 법이며, 그 이외의 것은 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 16. 롤스(J. Rawls)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 ②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 ③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타고난 소질,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 ④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문 17. 밀(J.S. Mil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양적 공리주의가 아닌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하였다.
- ② 효용을 규칙이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판단하고자 하였다.
- ③ 공리주의는 도덕의 기초를 사회적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④ 법과 정의를 사회복지의 증진 수단으로 보았다.
- 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수에 의한 전제(專制)를 경계하였다.

문 18.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인간은 자연에 의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타인의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더욱 공고한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데 있다.

- ① 홉스(T. Hobbes)
- ② 로크(J. Locke)
- ③ 스피노자(B. Spinoza)
- ④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 ⑤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문 19.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벤담(J. Bentham) - 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도덕적 평가는 법의 성립과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오스틴(J. Austin) - 국제법은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 ③ 홈즈(O.W. Holmes) - 법은 실제로 법원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일 뿐이다.
- ④ 슈타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합의욕이다.
- ⑤ 베르크봄(K. Bergbohm) - 국가가 지배에 기초하여 완성된 사실을 만들어내더라도 이는 국민의 승인이 있어야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문 20. 피니스(J. Finni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존재와 당위의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 ②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였다.
- ③ 생명, 지식, 실천적 합당성과 같은 인간선의 기본형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④ 인간선의 기본형식을 증명될 수 없는 자명한 가치로 보았다.
- ⑤ 실천적 합당성은 자의적인 선호의 배제, 정합적인 인생 계획의 추구 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문 2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고 추구할 수 있다.
 ㄴ. 권리의 정치 대신에 공동선의 정치가 필요하다.
 ㄷ. 국가는 법을 통해 특정한 가치관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ㄹ.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관념들 사이에서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ㅁ.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ㅂ.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자유주의

-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공동체주의

- ㄴ, ㄹ, ㅂ
 ㄴ, ㄹ, ㅁ
 ㄴ, ㄷ, ㅂ
 ㄱ, ㄹ, ㅂ
 ㄱ, ㄷ, ㅂ

문 22. 드워킨(R. Dwork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덕에 바탕을 둔 원리테제를 주장하였다.
 ② 통합성(integrity)으로서의 법을 주장하였다.
 ③ 구성적 법해석을 옹호하였다.
 ④ 각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법의 흠결 시 법관에게 무제한적인 법창조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문 23. 정의(正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보완적 원리로서 형평을 강조하였다.
 ②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정의가 결여된 국가는 강도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칸트(I. Kant)는 응보의 원칙에 따른 형사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④ 켈젠(H. Kelsen)은 정의를 법이념의 하나로 보았다.
 ⑤ 왈쩌(M. Walzer)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하였다.

문 24. 루만(N. Luhmann)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법체계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법체계는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특징을 갖는다.
 ③ 규범은 반(反)사실적으로 안정화된 기대이다.
 ④ 법의 정당성은 그 실질적 내용에 근거한다.
 ⑤ 실정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조건적 프로그램이다.

문 25. '어려운 사안'(hard case)의 해결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풀러(L. Fuller)는 최초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충실하게 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하트(H.L.A. Hart)는 법관의 법형성적 재량을 인정하였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실용주의적으로 판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포스너(R. Posner)는 이전의 판결과 정합적으로 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파운드(R. Pound)는 해석학적 방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헌법」은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된다.
 ② 대리인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대리인 규정이 준용된다.
 ③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르므로 「실용신안법」에는 「특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⑤ 「특허법」의 벌칙규정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문 2.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②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부도덕한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타인의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기존에 동일·유사한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창작한 자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요건을 갖추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문 3. 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② 특허권 존속기간 경과 후에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폐기청구
 ③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⑤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 4.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하여 설정등록할 수 없다.
 ② 상속에 의한 전용실시권 승계는 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설정행위로 정할 수 없다.
 ⑤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용실시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문 5.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 ~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 단순히 특허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 특허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6.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목축업분야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동물용 의약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의료기기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④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말하는 산업에는 3차 산업이 포함된다.

문 7. 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문 8. 특허권과 실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권은 청구항별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 ② 특허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해도 그 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 ⑤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 취소되면 그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문 9.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보성은 특허발명의 등록요건이지만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아니다.
- ②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다.
-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보정기간에 국어번역문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정되고 있다.
-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사유도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⑤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에는 공지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도 포함된다.
-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⑤ 물품의 내부에 부착되는 부품의 형상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디자인등록이 될 수 없다.

문 11. 「상표법」상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상이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경우
- ④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경우
- ⑤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문 12. 「상표법」상 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②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③ 상표에는 자타상품식별·품질보증·출처표시 기능 등이 있다.
- ④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될 수 없다.
- ⑤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문 13. 「상표법」의 규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상표권자
- ②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 ③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이해관계인
- ④ 상표권자, 통상사용권자
- ⑤ 누구든지

문 14.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도 처벌된다.
- ③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표는 몰수한다.
- ④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침해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문 15.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 국기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ㄴ. 저명한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예명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ㄷ.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ㄹ.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6. 권리의 존속(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발명을 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②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고안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④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10년이다.
- 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문 17. 저작권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면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다.
- ③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④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③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 19. 「저작권법」상 정의에 관한 용어를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ㄴ.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 ㄷ.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 ㄹ.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

- ① ㄱ. 발행 ㄴ. 방송 ㄷ. 전송 ㄹ. 라벨
- ② ㄱ. 방송 ㄴ. 발행 ㄷ. 복제 ㄹ. 포장
- ③ ㄱ. 방송 ㄴ. 발행 ㄷ. 전송 ㄹ. 라벨
- ④ ㄱ. 발행 ㄴ. 방송 ㄷ. 복제 ㄹ. 라벨
- ⑤ ㄱ. 방송 ㄴ. 라벨 ㄷ. 전송 ㄹ. 포장

문 20.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인용할 수 있다.
- ③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④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ㄷ. 2차적저작물작성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2.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④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중 동일한 저작자의 진술을 편집한 것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 23. 甲의 창작곡을 乙이 공연하는 장면을 A가 무단으로 촬영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가 침해하지 않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복제권 ② 甲의 배포권 ③ 甲의 공중송신권
 ④ 乙의 복제권 ⑤ 乙의 전송권

문 24. 다음 설명 중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된다

- ① 신탁 ② 소멸 ③ 양도
 ④ 경매 ⑤ 기탁

문 25. 「저작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음반에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발생한다.
 ②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음반제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④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침해죄로 처벌된다.
 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화재로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 기한연장을 해주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천재(天災)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다.
 ⑤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국세징수법」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제외).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 ① 증여세 ② 증권거래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⑤ 인지세

문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 甲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乙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④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제거래는 고려하지 아니함)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년간이다.

- ① 5 ② 7
 ③ 10 ④ 15
 ⑤ 20

문 5.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기는 ‘국세의 체납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③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과점주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
- ⑤ 과점주주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로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주주에게 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 ②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 ③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종합소득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최초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이 있다.
- ⑤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문 7.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판결로 그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납세의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과세표준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거부처분이므로 국세불복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8.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산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A)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B)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A B

① 1 - 10

③ 1 - 20

⑤ 6 - 50

A B

② 6 - 10

④ 1 - 50

문 9.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 ② 행정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③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④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로 한다.
- 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10. 국세불복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심판청구대상이 법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 조세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ㄷ.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대상이 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⑤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 ② 5억 원 미만 국세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납세고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그 고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한번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한다.
- ⑤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유지된다.

문 14.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 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ㄷ.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임원에게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ㄹ.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현실로 지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 된다.
- 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된다.

문 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ㄷ.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ㄹ. 예정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17. 세무공무원이 거주자 甲의 광고출연과 관련된 아래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甲의 2015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A주식회사는 2015년 중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甲을 모델로 한 신문광고를 1회 제작하였다.
- 甲은 출연료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밖의 다른 소득은 없다.
- 甲은 전업주부로 다른 직업은 없다.
- 광고출연과 관련하여 甲이 실제 지출한 경비는 없다.

- ①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이나,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 또한 5,000만 원이다.
- ②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이나,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 또한 5,000만 원이다.
- ③ 甲의 광고출연료는 부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다.
- ⑤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다.

문 18.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영업소는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 ㄴ.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ㄷ.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ㄹ.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9.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 ②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의 대상이 주로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한다.
-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 ⑤ 이자소득의 경우 관련되는 지급이자자가 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甲이 국내에서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甲은 그 대가를 A에게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A가 법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乙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③ A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구동되는 게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④ A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인 丙을 통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A가 그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문 2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 법인의 지점은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
-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 ④ A, B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A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박람회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문 2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A국가 소재 외국법인 사업자 B에게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 ⑤ 국선번호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공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문 23. 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B에게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3대를 8억 원(법령상 시가는 10억 원임)에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매'), 이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출자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 ㄴ. 이 사건 판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인 8억 원과 그 시가인 10억 원과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지만 이 사건 판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 ㄷ. 이 사건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B사의 위 컴퓨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그 시가인 10억 원이 된다.
- ㄹ.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4.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그 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 ② 국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③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④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 ⑤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문 25.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ㄴ.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ㄷ.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다.
- ㄹ.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